

2025년 2월 28일 제42호

연구위원 안혜영
연구위원 오유진
수석연구위원 신유란
연구위원 서유나
연구위원 이예린

HIF 월간 산업 이슈(2월)

Monthly Industrial Issue

트럼프 취임 1달, 관세 · 환율 및 주요 산업 영향 점검

정책 이슈

美 우선주의를 내세운 관세 정책 추진 현황과 한국의 영향

- 4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협상의 수단이 아닌 감세 수단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더 강력해졌고 기존 국가·품목관세 외 상호 관세까지 예고하고 있어 교역국과의 갈등이 고조
- 한국도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며, 정부와 기업이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협상 패키지를 마련하여 대응할 전망. 다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

환율

관세 전쟁^發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 한국은 품목별 관세뿐만 아니라 상호 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4월까지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원/달러 환율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환율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

철강

본격화되는 美관세 전쟁, 국내 철강업의 미래는 안갯속

- 국내 철강업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로 단기적인 수출 경쟁력 하락 및 중기적으로 對美 시장 점유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
- 특히 미국향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 업계를 중심으로 수익 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철강사들의 현지 생산 확대 및 신흥 시장 개척 등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

반도체

美 반도체 관세,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반도체 품목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 미국은 한국의 주요 반도체 수출국이나 반도체 패키징이 대만, 중국 등에서 이뤄지는 만큼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반도체 AI 패권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제재는 관세 부과를 넘어 중국 수출 통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어 기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방향을 모색할 전망

자동차

관세^發 불확실성 극심, 현지 생산 확대로 대응

- 자동차 수입 관세 25% 등 실행시 역대 최고 수준인 미국 내 차량 가격에 관세가 더해져 판매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전가 어려움 등으로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
- 美 공장이 있는 현대차/기아, 대형 부품사 등은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한국 GM은 멕시코/캐나다 등 다른 생산기지와의 관세를 격차, 본사 전략 등에 따라 사업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

산업 이슈

정책 이슈

美 우선주의 관세 정책 추진 현황과 한국의 영향

환율

관세 전쟁發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철강

본격화되는 美관세 전쟁, 국내 철강업의 미래는 안갯속

반도체

美 반도체 관세,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자동차

관세發 불확실성 극심, 현지 생산 확대로 대응

정책 이슈

美 우선주의 관세 정책 추진 현황과 한국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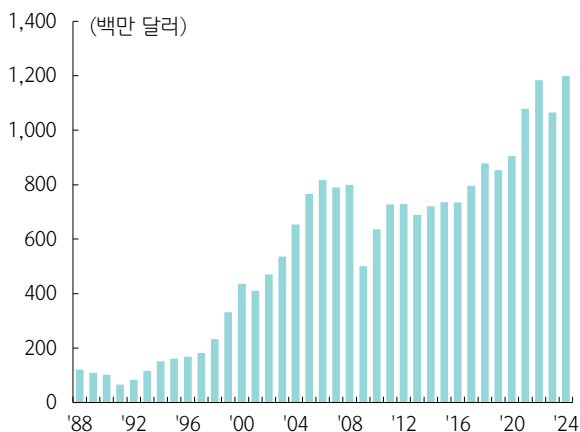
연구위원 안혜영

※ Summary : 4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1기 대비 더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 중. 이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목적이 안보/패권경쟁을 위한 협상 수단에서 감세를 위한 세수 확보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 트럼프는 국가관세, 품목관세에 이어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상호관세까지 고려하며 관세 그물망을 촘촘하게 구축 중. 현재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8위 국가로 美 관세 공격에 노출되어 있지만 미국과 경쟁국과의 관계, 국내 생산 설비 위치 등에 따라 산업별 영향은 차별화 될 전망. 현재 주요국들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적극 대응 중이며 한국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 패키지를 마련할 전망이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취임 전: 위협)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실현 위해 취임 즉시 관세 부과를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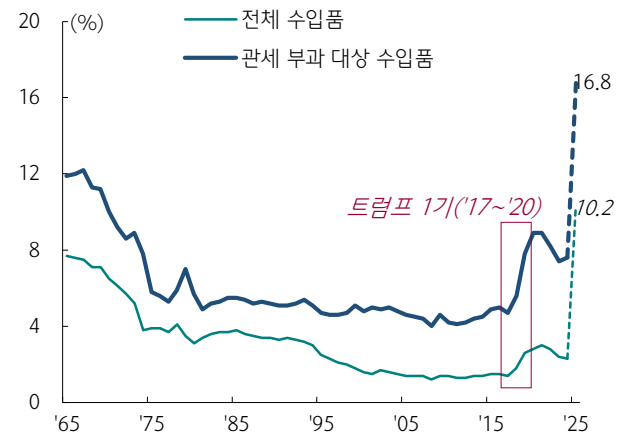
- 트럼프는 1기 집권기 부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下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WTO체제를 부정하고 '미국 우선'을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
 - 트럼프는 무역법 201조,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중국 등 주요국에 관세를 부과
 - '60년대 자유주의 무역 확산으로 낮아졌던 미국의 관세율은 트럼프 집권 1기('17~'20)에 상승 시작
- 4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가 불공정 무역 해소, 자국 산업 보호,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 예고
 -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취임 즉시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 부과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멕시코 생산 중국기업 자동차에 대한 100~200% 관세 부과 등을 언급
 - 2기 행정부 인사에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하워드 러트릭(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USTR 대표) 등을 임명

그림1 | 미국 무역적자 규모



자료 : 한국 무역협회

그림2 | 미국 관세율 변화



주 : 점선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관세 부과 시 예상되는 관세
자료 : PIIE, USITC

■ (취임 한 달 : 간보기) 시간 차 관세 폭격을 퍼부었지만 기간 유예를 통해 협상의 여지를 둠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선 공약에서 내세운 관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남
 -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무역적자 원인 및 영향 조사, 주요 상대국들의 불공정 무역관행, 기존 무역협정 검토 및 개정 등을 4월 1일까지 조사하라고 지시
- 취임 한 달여가 지난 현재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 폭탄'을 차례로 내놓고 있으나 아직은 '예고 → 발표 → 유예'의 패턴을 보이며 상대국에 협상의 여지를 두는 모습
 - △2월 1일,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25% 추가 관세는 3월 4일까지 시행 보류, △10일,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한 25%의 수입 관세도 3월 12일 시행 예정 △13일, 상호관세 4월 시행 예정 △19일, 한 달 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예고
- 실제 트럼프가 관세 발표 후 발효까지 유예 기간을 두자 세계 각국은 불법 이민과 마약 통제, 對美 투자 확대, 미국산 에너지 구입 확대, 관세 인하 등을 제시하며 트럼프 달래기에 나섬
- 단,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 추가 관세의 경우 중국이 트럼프의 발표 직후 보복 관세로 대응하자 2월 4일 즉시 관세를 발효한데 이어 3월 4일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
 - 中은 미국산 석탄, LNG, 원유, 대형차 등에 10~15%의 추가 관세 부과, 희토류 수출 통제로 대응

표1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관련 주요 행정명령 및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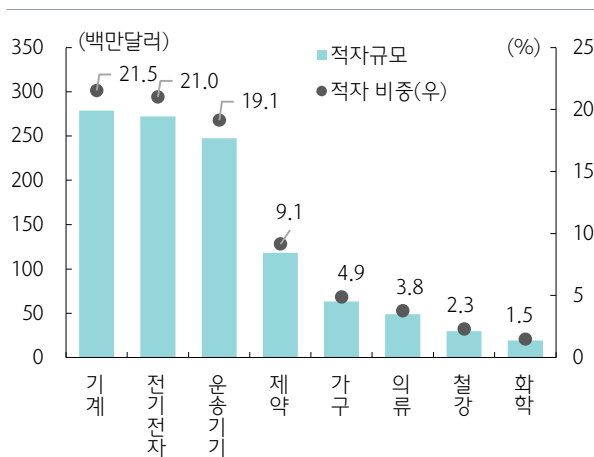
일자	행정명령 및 검토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
1.20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규모 무역적자 원인 및 영향 조사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징수 등을 위한 Extra Revenue Service(ERS) 설립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기존 무역협정 및 부문별 무역협정 검토 및 개정 권고 -25.4.1까지 상무부, 재무부, USTR 등은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
2.1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캐나다산 에너지는 10%) 추가 관세 부가, 2월 4일부터 시행 -캐나다, 멕시코가 보복 조치 취할 시 관세 인상 및 범위 확대 가능하며, 적절한 조치 취했다고 판단 시 관세 해제 가능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최소 면세 혜택 제외 -중국이 보복 조치 취할 시 추가 관세 인상 및 범위 확대 가능, 마약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 시 관세 해제 가능
2.3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유예 -3월 4일까지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 북부/남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 마약 위기가 완화되었는지 평가
2.10	철강 수입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 적용, 3월 12일부터 시행 -3월 12일부터 한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에 대한 예외 조치와 규정 효력 정지, 기존 공표한 제품 면제 절차 철회
2.11	알루미늄 제품과 파생 제품에 25% 추가 관세 적용, 3월 12일부터 시행 -3월 12일부터 기존 조항 효력 정지
2.13	상호 무역 및 관세 (Reciprocal Trade and Tariffs)¹⁾ -각 무역 상대국에 대해 상호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 부과, 비호혜적 무역 관계 검토 -4월 1일 까지 각 무역 상대국과 호혜적 무역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상세 해결책을 기술한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
2.19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에 대해 25% 이상의 추가 관세 예고, 한 달 이내 발표
2.26	구리 고율관세 부과 검토 지시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2.27	EU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계획 발표
2.28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총 20%)부과, 3월 4일 발효 멕시코, 캐나다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3월 4일 발효

주 : 1)은 행정명령(Presidential Action) 이 아닌 메모랜덤(Memorandum) 형태로 발표, 2월 28일 발표 기준
 자료 : Whitehouse, 한신평

■ (한 달 이후 : 관세의 무기화): 미국의 감세 재원 확보를 위해 관세를 본격적으로 활용

- 트럼프는 관세 유예 기간 동안 각국과 최대한 많은 협상을 이끌어 낸 후, 미국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고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해 관세의 무기화 행보를 가속화할 전망
 - 트럼프는 취임 한 달만에 강성 지지층 '마가'가 집결한 씨팩(CPAC)에서 관세만 15차례 언급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목적에 따라 협상을 위한 징벌관세(punitive tariff), 무역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관세(structural tariff), 세수 충당과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로 구분
- (징벌관세) 최근 트럼프의 징벌관세는 국가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으며 대상국들이 이를 피하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협상에 나서고 있어 징벌 성격의 관세는 줄어들 전망
 - 미국 입장에서 자국에 큰 피해를 입히거나 적자가 큰 국가 타겟이 되며 협상을 통해 유보 및 취소 가능
 - * 취임 직후 마약과 불법 이민자 유입 등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국가 관세를 부과
- (구조관세) 대부분 품목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으며 징벌관세와 달리 미국의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협상의 여지가 낮아 구조관세는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 높음
 - 미국 적자규모가 큰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순차적으로 관세 부과 예정
- (상호관세)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대응에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개념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통해 관세 정책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갈 전망
 -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보조금, 환율, 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 조치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힘
-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세웠던 보편관세 대신 상호관세에 집중하는 것은 특정 국가와 품목을 겨냥할 수 있어 더 직접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
 - 상호관세가 법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므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상대국을 다양한 비관세 장벽으로 압박 가능

그림3 | 미국 품목별 적자 규모 및 비중 (2024년 기준)



주 : HS CODE 2단위 기준
자료 : Trade Map

표2 | 미국 상호관세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념	■ 각 무역 상대국에 대해 상호관세에 상응한 관세 결정
검토 사항	■ 모든 미국 무역상대국과의 비호혜적 무역 관세를 검토하며 여기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 (a)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b)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 세금 (c) 비관세조치(보조금, 불공정한 정책 또는 관행) (d) 상대국의 환율 정책 (e)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기타 관행
발효 시기	■ 위 내용을 조사하여 4.1까지 대통령에 제출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 내 발효 예정

자료 : Value Search

■ (美관세 수단의 변화) 협상 수단을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부상

-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안보, 패권경쟁을 위한 협상 수단에서 점차 세수 확보를 통한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세 수단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관세'는 미국 무역 적자 축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주로 미국의 외교, 안보, 사회 등 비경제적인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협상 도구로 활용되어 옴
- 트럼프가 취임 직후부터 관세 부과를 서두른 것은 관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관세 부과→세수 확보→소득세·법인세 감세)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기 때문
- 트럼프는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4조 6천억 달러에 이르는 감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現소득세 중심의 세금 체계를 관세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힘
 - 지난 20일 하워드 러트릭 美 상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국세청(IRS)을 폐지하고 모든 외부인에게 세금(관세)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
- 글로벌 전망 기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세수를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목표 실현은 어렵고 GDP감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어져 美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봄
 - 美 Tax Foundation은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GDP가 0.6%~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만큼, 임기 동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을 주장하며 상호관세를 중심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

■ (한국의 영향) 개별 업종별로 위협 요인과 기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

- 한국은 아직 트럼프의 관세 공격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미국 무역적자 8위 국가이며, 트럼프 1기 대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3~4배 확대된 만큼 잠재적 공격 대상으로 판단

그림4 | 美 연방정부 수입추이 및 향후 관세로 인한 세수 전망



주 : 2.25 기준 확정 및 예정된 국가, 품목 관세만 고려
자료 : OMB, Tax foundation

표3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집행 시 미국 경제 영향

구분	캐나다/멕시코 25% 추가 부과	중국 10% 추가 부과	철강/알루미늄 25% 부과	자동차/부품 25% 부과
GDP	-0.3%	-0.1%	-0.05%	-0.1%
Capital Stock	-0.3%	-0.1%	-0.05%	-0.1%
고용	-269,000명	-73,000명	-29,000명	-8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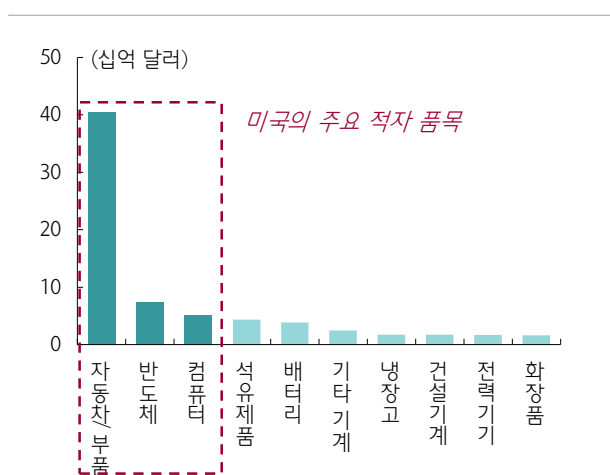
주 : 상대국의 보복조치는 고려하지 않음
자료 : Tax Foundation General Equilibrium Model

- 특히 미국이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은 국내 對美 주력 수출 품목이며 의약품도 최근 對美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으로 타격이 불가피
 - 트럼프는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3월 중 자동차·부품, 반도체, 의약품에 최소 25%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우려 확대
- 상호관세의 경우 한미 FTA 체결로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지만 핵심 산업에서 미국과 무역 불균형을 감안 시 미국은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
 - 미국은 비관세 조치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해 자국 안보(무역법 제301조)를 이유로 조사,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플랫폼법 폐지 등을 요구할 가능성 높음
- 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2기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관세 부과 강도와 범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나 對美 수출은 '24년 대비 8~10% 감소, 전체 수출도 2% 내외 감소할 전망
 - 미국이 관세 장벽을 강화할 경우 對美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미국 외 지역에서도 보호무역이 강화될 수 있어 내수 및 수출 시장 전반으로 부정적 영향 확대
- ※ 한국은행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은 '25년 0.1%p, '26년 0.25%p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국내 산업과 경합도가 높은 경쟁국의 관세율, 국내 생산 설비 위치, 미국 산업의 경쟁력,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국내 개별산업별로 차별화된 영향이 예상
 - 멕시코에 생산 공장이 있는 자동차 기업은 미국 수출 시 국가 관세(25%)와 품목 관세(25%)에 중복 노출
 - 한국은 상품 시장 개방도가 높고 미국이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행위(환율 조작, 직·간접 보조금, 세액공제, 수입 제한)의 수준이 경쟁국 대비 낮아 상호관세 부과 시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 (대응) 주요국과 미국 기업도 4월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 부과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

- 주요국(일본, 인도, EU, 캐나다, 대만 등)은 트럼프 관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별도의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트럼프 관련 인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

그림5 | 한국의 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상위 품목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표4 | 미국이 한국에 적용 가능한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미국의 주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10%)가 수출을 저해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지속 요구
플랫폼 관련 규제	美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차별적이라는 입장
의약품 약가	의약품 가격 책정 및 보험 급여 관련 불투명성
유전자변형 농산물 규제	통관,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입장
자동차 배출관련 인증 절차	환경부의 인증 기준이 미국 보다 엄격
미디어·통신·전력 등 투자 제한	외국인의 투자 제한 등 관련 규제에 불만

자료 : 언론자료 정리, 하나금융연구소

- 對미 무역 흑자국인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산 수입 확대, 미국 투자 확대, 자국 관세율을 인하 등을 통해 적극 대응 중
- 중국, EU 등 규모가 큰 국가들은 보복관세 부과,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시사하며 미국과 대립 중이나 정면 충돌 보다는 합의를 위한 협상을 추진할 전망
- 미국 기업인 애플 또한 자사 중국 등 해외 공장 생산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4년 간 미국 내 5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국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 패키지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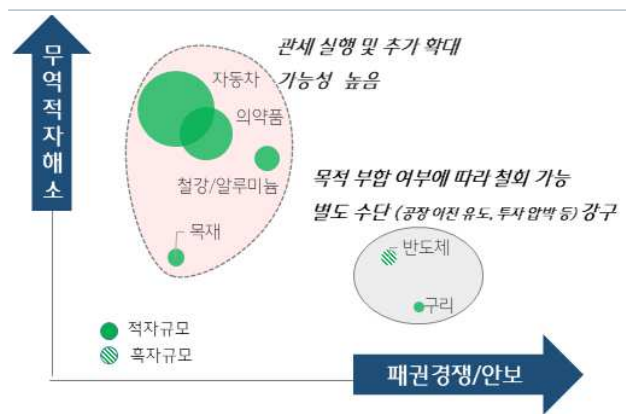
- 한국도 트럼프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 미국산 수입 확대, 미국 투자 및 협력 확대 등 미국과 주고받을 수 있는 관세 대응 카드 준비에 나설 전망
 -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되 대미 수입이 확대되어도 국내 산업에 타격이 약한 품목(천연가스, 원유, 美첨단 장비, 무기, 항공기 등)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
 - 미국 관심 분야인 반도체, 배터리, 조선, 소형원자로 등에서는 협력을 강화하여 압박 완화를 유도
-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 목적(무역적자 해소 or 안보/패권경쟁)에 따라 관세 실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 대상 품목별로 차별화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트럼프의 공격이 전 세계를 향하므로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미-주요국 간 관계도 철저히 검토하여 한국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형성한다면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단, 트럼프의 전형적인 협상 패턴('선충격-후협상')에서는 일본, 인도처럼 정상 회담이 중요하나 현재 한국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표5 |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

주요국	대응
캐나다/멕시코	■ 트럼프와 정상 간 통화 ■ 불법이민, 마약 단속 약속 후 관세 유예
인도	■ 트럼프와 정상 회담(13일) ■ 미국산 에너지, 무기 수입 확대 ■ 70여개 품목에 대한 기본 관세 인하
일본	■ 트럼프와 정상 회담(7일) ■ 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대미 투자 의지 표명
EU	■ 무역담당 집행위원, 17일 미 상무장관 등과 회동 ■ 관세 인하에 대한 긍정 의견 이끌어냄 ■ 단, 관세 부과시 美 빅테크들의 IT 서비스 차단 예고
대만	■ TSMC 인텔 공장 운영권 인수 검토

자료 : 국제금융센터, 언론자료 정리

그림6 | 미국의 관세 부과 목적에 따른 관세 실행 방향



주 : 1.버블 사이즈는 미국의 무역수지 규모, 2.현재 관세 대상으로 거론된 품목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환율

트럼프 취임 1달, 관세 전쟁^發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수석연구원 신유란

※ Summary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려보다 온건한 관세 정책 시행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속도감 있는 관세 정책 시행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제한.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예측이 어려워 불확실성이 증대. 한국은 품목별 관세뿐만 아니라 상호 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환율이 재상승할 우려도 상존. 추후 관세 정책의 수위와 미국과의 협상 진행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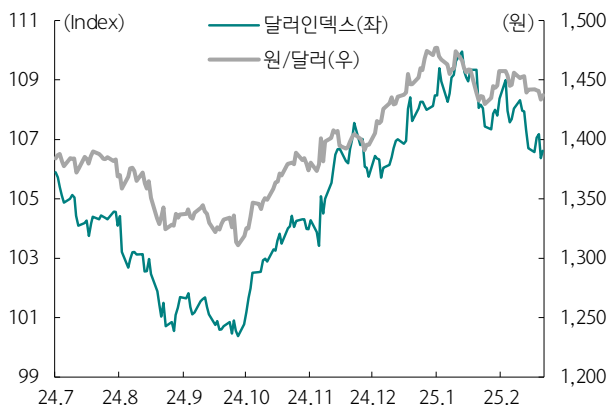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취임 이후 우려보다 온건한 관세 정책 시행으로 상승폭 일시적 축소

-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 전 급진적인 관세 정책 시행에 대한 경계감으로 달러화가 급등하고 국내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며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상승
- 그러나 취임 이후 시장 우려보다 초기 관세 정책이 온건하게 시행되면서 시장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되고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축소
 - 트럼프의 관세 방식이 협상 전략의 일환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며 과도한 경계심리가 진정

■ 달러화 약세 전환에도 대내외 불안 요인 지속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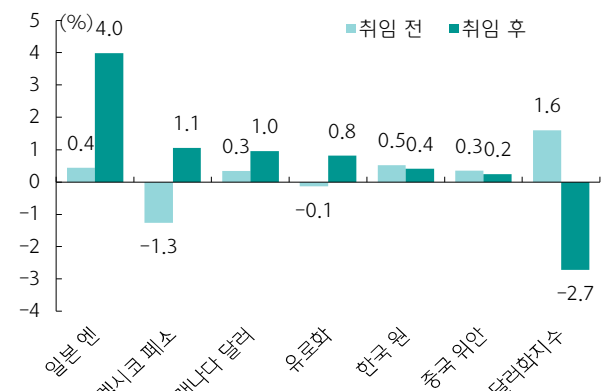
-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 이후 1개월 간 달러 가치는 2.7% 하락한 반면 원화 가치는 0.4% 절상에 그치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절상폭이 미미한 수준
- 이는 국내 정정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發 관세 전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수출 부진 및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기 때문

그림7 | 원/달러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8 | 트럼프 취임 전·후 한 달간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



자료 : Bloomberg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속도감 있는 관세 정책 시행이 원/달러 환율 하락을 제한한 주 원인

- 트럼프 1기·2기 행정부 모두 관세 공약의 실행에 비교적 협상가능성을 열고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달러 강세 추세가 취임 직후에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전개
- 그러나 취임 후 1년여 뒤에 무역 갈등이 본격화된 1기와 달리, 2기에는 취임과 동시에 관세 정책의 실행 속도도 빨라지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을 제한
 -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달러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관세 전쟁 발발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1기와 비교해 하락이 더디게 진행
-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중국에 집중했던 1기와 달리 한국을 포함한 교역국 전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도 크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원화에 미치는 위험도 높아진 상황
 - 트럼프 1기 관세 전쟁은 美·中을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2기에는 동맹국을 포함한 전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이 진행 중

■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구조적 강달러 요인과 겹치며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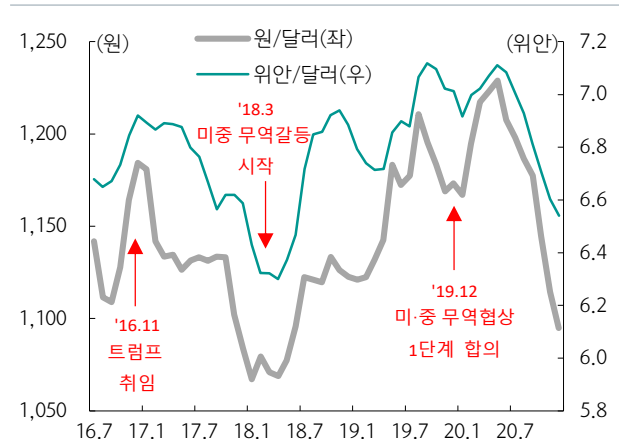
-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국가별 관세 부과 후 유예,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이후 유예를 반복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환율 변동성도 확대
- 국가별, 품목별 관세 모두 전면 철회가 아닌 한시적 유예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앞으로 추가적인 관세 정책 시행에 따른 리스크도 잔존
- 특히 구조적 강달러 요인이 지속되는 점 또한 무역 긴장 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며 달러 강세를 심화시키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을 어렵게 만들고 변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
 - 미국의 양호한 성장세 및 높은 내외금리차,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구조적 달러 강세 요인은 단기간에 해소가 어려운 상황

그림9 | 트럼프 취임 전·후 원/달러 환율 추이 비교



자료 : Bloomberg

그림10 | 美·中 무역 분쟁 시기 원, 위안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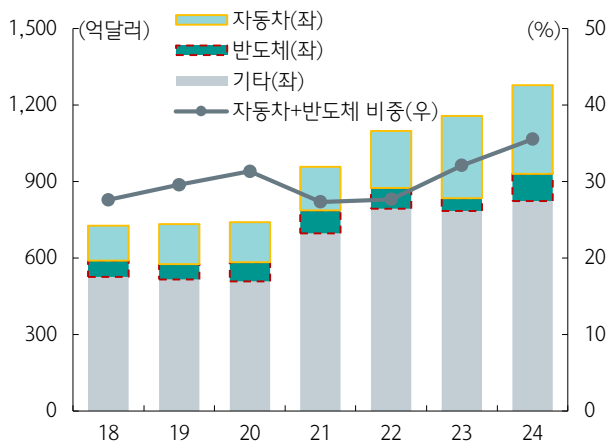
■ 한국은 품목별 관세뿐만 아니라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對美 수출 비중 1, 2위인 자동차, 반도체에도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의 對美 수출 감소 우려가 확대
 - 관세 부과 정도에 따라 자동차, 반도체 對美 수출은 각각 5.9~13.6%, 4.7~8.3% 감소 전망(산업연구원)
- 더욱이 부가가치세 포함 비관세장벽(TBT, SPS) 등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국가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위험 역시 상존
 - 한미간 FTA 협정 체결로 한국의 對美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대 수준이나, 기술장벽(TBT),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등 비관세조치를 다소 포괄적으로 적용해 미국의 압박이 예상
- 따라서 4월까지 예정된 한미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의 파급 효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환율 변동성 역시 크게 확대될 가능성 농후
 - 한국은 미국의 상위무역적자국 8위로, 국가별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편

■ 트럼프發 관세 전쟁 확전에 따른 원/달러 환율 재상승 및 변동성 확대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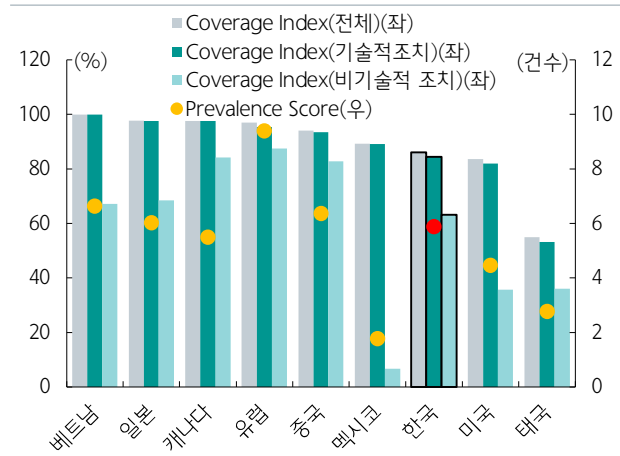
- 트럼프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면서 4월 초 관세 부과 확정 전까지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가 원/달러 환율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
- 3월 중 예상되는 국내 정정불안 완화, 엔화위안화 강세 및 美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른 달러 약세 등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상호 관세 등 추가적인 관세 부과 시 원/달러 환율의 재상승 및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어 향후 기업들의 대응이 중요
 - 환율 변동 보험 또는 변동성 헤지를 위한 외환 전략과 현지 생산 확대 등 실질적 대응 방안 검토

그림11 | 한국의 對미국 수출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12 | 주요국 비관세조치 수준 현황



주 : Coverage Index는 비관세조치가 수입품목 중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범위를 나타내는 지표, Prevalence Score는 품목당 적용되는 비관세조치의 수로 규제의 중첩성을 나타냄
자료 : UNCTAD

C24. 철강

본격화되는 美관세 전쟁, 국내 철강업의 미래는 안갯속

연구원 이예린

※ Summary : 미국 정부의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25% 관세 일괄 적용 조치가 3.12부터 시행될 예정. 미국은 수출 수익성이 높은 국내 철강 산업의 중요한 시장으로 '18년 쿼터제 적용 이후 미국향 철강 수출량은 축소되었으나 수출액은 증가하는 추세. 철강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시, 수출경쟁력 하락 및 시장 점유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 특히 미국향 수출 의존도가 큰 강관업계를 중심으로 수익 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 이에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신시장 개척 등 미국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중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강화하며 미국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

- 3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인 해당 조치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관세 적용 대상이며 적용 품목도 확대되어 1차 철강 외에도 가공된 철강제품*까지 포함

* 미국에서 조강한 것을 가공한 파생제품의 경우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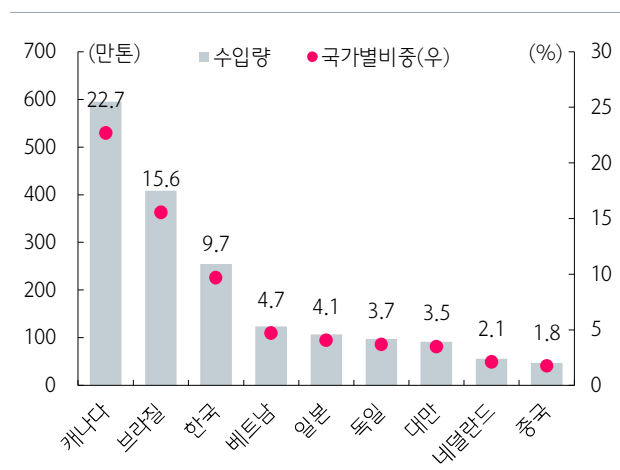
- 한국은 263만톤 물량에 대해 무관세 쿼터 혜택을 받아왔으나, 기존에 한국, EU 회원국, 호주 등에 적용되던 면제 및 예외 조항은 철회되고 25% 관세가 적용될 예정
- 뿐만 아니라 美정부가 북미 원산지 강화 등 관세 우회 경로 차단 및 관리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외 지역에서 생산된 조강을 멕시코 등에서 다른 형태로 가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

표6 | 기존 232조 국가별 예외조치 운영 현황

면제	구분	쿼터			저울관세할당(TRQ)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EU	일본	영국
멕시코, 캐나다, 호주	철강	263만	419만	18만	330만	125만	50만
	알루미늄	-	-	18만	-	-	2.2만
	시행일	'18.1			'22.1	'22.4	'22.6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13 | 미국 철강 국가별 수입 비중



자료 : 국제무역청

■ '18년 쿼터제 적용 이후 對美 철강 수출량은 축소되었으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 미국向 철강 수출 평균단가는 1,432달러/톤으로 타수출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수익성이 높은 편으로 미국은 국내 철강 산업의 중요한 시장
 - '24년 국가별 철강 수출 평균단가(\$/톤) : (미국)1,432, (중국)1,389, (일본)966, (인도)825, (베트남)1,012
- '24년 기준 한국 전체 철강 수출액(347억달러) 중 미국向 수출이 1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물량 기준으로는 10.1%(3위)를 차지
- '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쿼터제가 적용되며 과거 대비 對美 수출량은 축소되었으나, '21년 미국 경기 활황 및 원화가치 평가절하 등으로 수출액은 증가해 '24년 기준 수출량은 305만톤, 수출액은 48.3억 달러를 기록
 - 수출량/수출액 추이(만톤, 억달러) : 431/41.7('15) → 289/36.3('18) → 298/46.1('21) → 305/48.3('24)

■ 트럼프의 철강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은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 모든 철강 수입품에 동일하게 25% 관세가 부과되어 경쟁국과의 가격경쟁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며 수출 물량이 감소할 수 있고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는 판가 인상도 어려워 수출 마진 축소가 불가피
 - '18년 이후 적용되어 왔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출 물량 확대에 대한 기대도 일부 존재
- 관세 부과 조치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미국산 철강의 수요가 증가하며 철강사들이 생산량을 확대할 경우 미국의 철강 수입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
-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철강사의 생산 확대, 시장 경쟁력 약화로 한국 철강업계의 시장 점유율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

표7 | 수출 대상 국가별 철강 수출 가격

(단위: \$/톤)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세계	1,032	952	851	1,235	1,381	1,191	1,092
중국	1,036	976	810	1,258	1,409	1,350	1,389
미국	1,166	1,188	1,011	1,430	1,890	1,599	1,432
일본	971	961	894	1,081	1,158	1,034	966
인도	845	810	780	1,074	1,108	937	825
베트남	883	862	816	1,172	1,301	1,125	1,012
태국	923	849	794	1,058	1,177	1,004	956

주 : 전철강 수출 평균단가 기준
자료 : 한국철강협회

표8 | 철강 관세 부과 시 주요국별 세율 비교

국가명	MFN (0~10%)	기존 232조 (10%) '18.3월 발효	301조 (25%) '24.9월 발효	대중국 보편관세 (10%) '25.2월 발효	변경 232조 (25%) '25.3월 발효
캐나다 (USMCA)	0%	0%	-	-	25%
브라질	0~10%	0% (쿼터제)	-	-	25%
멕시코 (USMCA)	0%	0%	-	-	25%
한국 (FTA)	0%	0% (쿼터제)	-	-	25%
베트남	0~10%	25%	-	-	-
중국	0~10%	25%	25%	10%	-
EU	0~10%	0% (TRQ)	-	-	25%

자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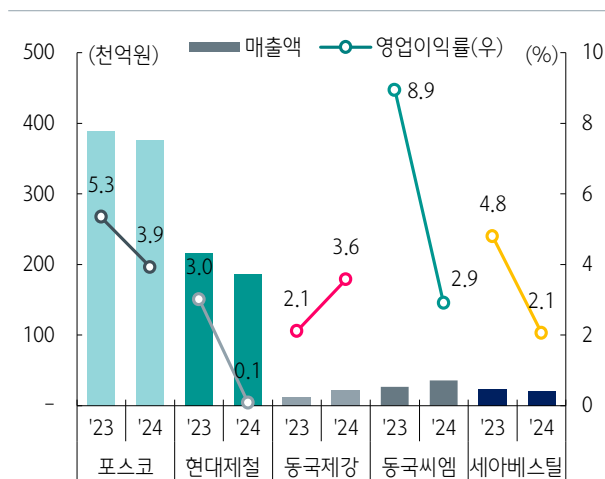
■ 업황 침체 장기화 국면에 진입한 국내 철강업은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向 수출 비중이 높은 강관업계를 중심으로 수익 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내수 부진 및 중국發 리스크 요인 등으로 국내 철강 산업의 업황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국내 철강업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
 - '24년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 5개사 합산매출액은 '23년 대비 4.3% 감소하고 합산영업이익률은 2.0%p 하락한 2.7%를 기록
- 강관은 총 출하량 대비 미국向 수출 비중이 23.9%로 높은 편이나, 판재류는 높지 않아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
 - '24년 기준 강관은 전체 對美 수출량의 37.2% 열연강판은 17.2%, 봉형강은 6.6%를 차지
 - 강종별 對美 수출량/출하 계 : (강관)23.9%, (표면처리)3.8%, (열연)3.1%, (중후판)2.2%
- 특히 미국 시장 규모가 큰 에너지용 강관은 다른 국가로의 수출 전환이 어려워 쿼터제 하에서 미국 강관 시장을 확보해왔던 강관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 강관 업계의 핵심 수익원인 유정용 강관 및 송유관은 미국 의존도가 각각 97.9%, 78.2%

■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신시장 개척 등 트럼프發 관세 대응을 위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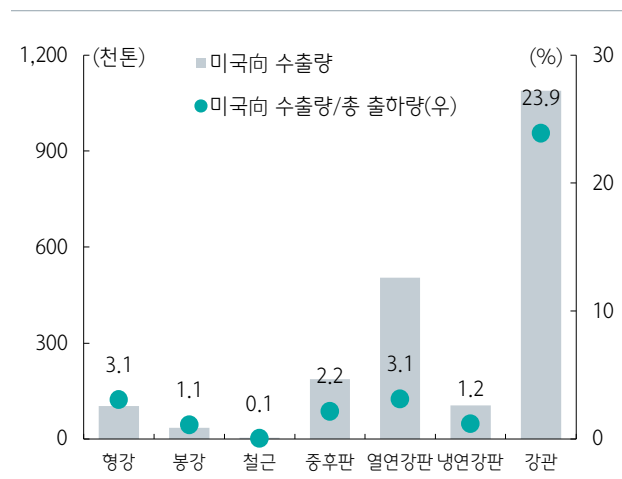
- 현대제철은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차량용 강판 생산을 위해 미국 현지에서 '29년 완공을 목표로 전기로 제철소 건설 투자(약 10조원 규모)를 추진 중
- 동국제강그룹은 1월 호주 현지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등 호주 시장 개척 및 확장을 통해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 동국씨엠의 호주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 중 약 10%를, 미국 수출량은 15~20%를 차지

그림14 | 주요 철강 5개사의 실적 추이



자료 : 각 사 IR 자료

그림15 | 품목별 국내 총 출하량 대비 미국向 수출량



자료 : 한국철강협회

- 미국 내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세아제강(연산 25만톤), 넥스틸(연산 12만톤) 등 주요 강관업체들은 현지 공장 가동률을 개선해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휴스틸은 7.2만톤 규모의 유정용 강관 공장이 6월에 완공 예정이며 향후 2단계 증설을 통해 25만톤 규모까지 생산능력 확대 계획

■ 美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후행되는 수입 규제 및 관세 부과 대상국별 대응 방향에 따라 국내 철강 산업의 영향 정도는 달라질 전망

- 트럼프發 관세는 모든 국가에 일괄 부과되므로 관세에 따른 경쟁국 대비 차별적 물량 감소는 크지 않겠으나, 다만, 베트남 등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기존 관세 부과국 대비 경쟁 여건이 악화될 위험은 존재
 - '24년 대만과 베트남의 미국向 철강(HS 72 기준)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64.6%, 210.1%가 증가
- 향후 국가별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차등 적용될 경우,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주요 수출국들의 관세 장벽이 강화될 수 있어 글로벌 철강업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
 - 중국은 보복 관세 부과로 관세 조치에 대응한 반면, 미 정부의 호주 관세 면제 가능성 언급, 일본과 한국의 관세 면제 요청 등 향후 국가별 관세 적용 범위 및 대상이 조정될 여지도 있음
- 한편, 캐나다·멕시코에 적용 유예된 관세가 재가동될 경우, 철강 우회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국에 진출한 가전, 자동차 산업 등의 관세 부담이 철강재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 한국의 캐나다·멕시코向 철강·비철금속 수출액 중 현지에서 가공되어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각각 41%, 35%로 높은 편
- 국내 철강업은 美관세 관련 후속 조치와 주요 수출국들의 무역 규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 및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 📌

표9 | 미국 진출 강관업체별 생산능력

	국내 Capa	미국 Capa
세아제강지주	국내외 강관 약 240만톤	25만톤 (‘24.3Q 가동률 51%)
세아제강	160만톤	-
넥스틸	110만톤	12만톤
휴스틸	150만톤	7만톤 (‘25.6 완공 예정)

자료 : 각 사, 메리츠증권

그림16 | 미국의 對중국·캐나다·멕시코·보편관세 부과 영향 분석



주1 : 철강·비철금속 기준

주2 : 對중국 20%p, 캐나다·멕시코 35%p, 기타국 10%p 관세 인상 효과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하나금융연구소

C26. 반도체

美 반도체 관세,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연구원 서유나

※ Summary :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며 관세를 내지 않으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 이에 대비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현지 생산 확대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 중. 미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5위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이지만 반도체 패키징이 대만·중국에서 이뤄지는 만큼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또한 반도체는 AI 패권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제재는 관세 부과를 넘어 중국 수출 통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어 기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방향을 모색할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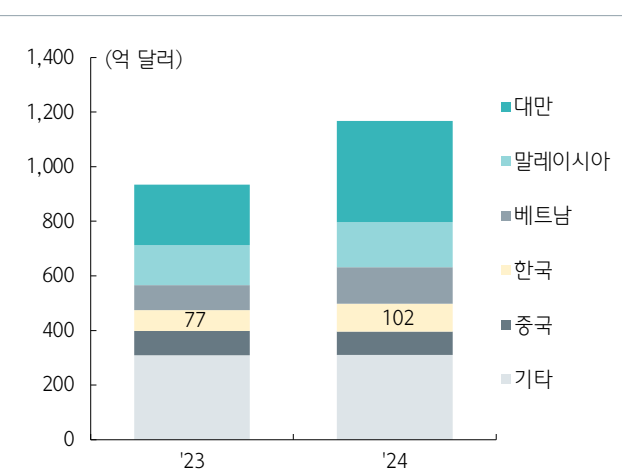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으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기조를 강조
- 반도체는 1997년 정보기술협정(ITA)¹⁾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무관세 품목이나,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불공정 무역행위 등 예외 규정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추진 중
- 이는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확보와 AI 패권경쟁의 우위를 목표로 한 정책으로 해석되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시 반도체 제조 시설이 많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영향권
 - '24년 미국의 주요 반도체 수입국은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으로 4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551억 달러

표10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도체 관련 언급

분야	시기	내용
CHIPS Act 보조금	2024.7.16	"미국은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뺏어간 대만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
CHIPS Act 보조금	2025.1.29	"칩스법에 따라 기업들에 지급하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
반도체 품목관세	2025.2.19	"반도체 관세 25% 그 이상, 계속 인상될 것. 미국에서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들(기업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
반도체 품목관세	2025.2.21	"기업별 10억 달러(약 1.4조원) 투자하면 패스트트랙 절차 지원"

자료 : 언론보도 종합, 하나금융연구소

그림17 | 미국의 반도체 수입액



주: HS 847330, 8541, 8542 합산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하나금융연구소

1)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반도체, 컴퓨터, 통신 장비, 반도체 제조 장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 제품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다자간 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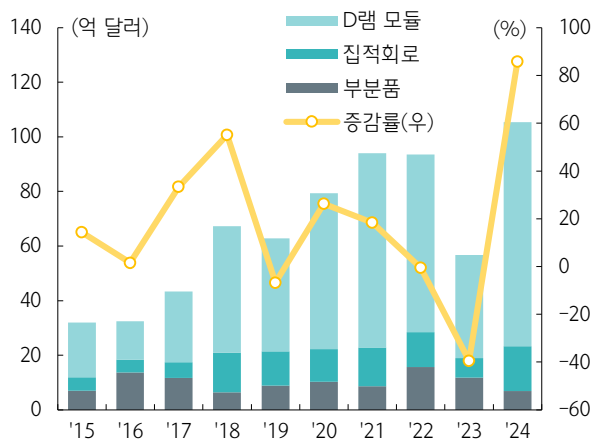
■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D램 모듈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글로벌 반도체 불황기를 제외하고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4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5.9% 증가한 105.4억 달러를 기록
 - 미국은 한국 반도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로 5위를 차지
- 반도체 수출 품목은 크게 D램 모듈, 반도체 집적회로(칩), 반도체 부분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미 반도체 수출액에서 각각 약 66.3%, 16.3%, 17.4%('15~'24년 평균)를 차지
- '24년 D램 모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7%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내 주요 IT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확장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로 D램 모듈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

■ 다만 반도체 집적회로는 중간재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비중이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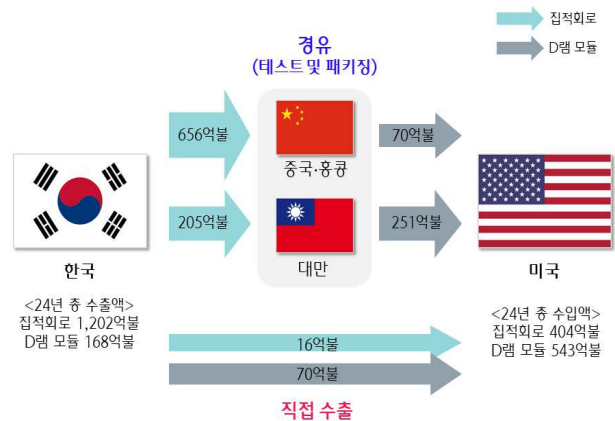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D램 모듈을 제외한 다른 반도체 제품의 대미 직접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집적회로 수출액 순위 및 비중('24년 기준): 1위 중국·홍콩(54.6%), 2위 대만(17.1%), 9위 미국(1.4%)
- 이는 대만, 중국 등에서 패키징 과정을 거치기 때문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칩이 대만이나 중국을 경유하여 미국에 최종 제품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HBM(고대역폭 메모리)의 경우 한국에서 생산된 HBM이 대만 TSMC 등으로 수출되어 첨단 패키징 기술이 적용된 뒤 미국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인 Blackwell 등에 탑재
- 글로벌 패키징 업체가 ASE, TSMC, JCET 등 대만, 중국 업체인 한편, AI 반도체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해 패키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수출입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다만 Amkor(美), SK하이닉스의 미국 패키징 공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약간의 재편은 있을 수 있음

그림18 | 대미 반도체 수출



주: D램 모듈(HS 847330), 반도체 집적회로(HS 8542), 반도체 부분품(HS 8541)
자료: 한국무역협회, 하나금융연구소

그림19 | 반도체 수출입 분업 구조



주: D램 모듈(HS 847330), 집적회로(HS 8542)의 한국 수출액 및 미국 수입액 기준
자료: Trademap, 하나금융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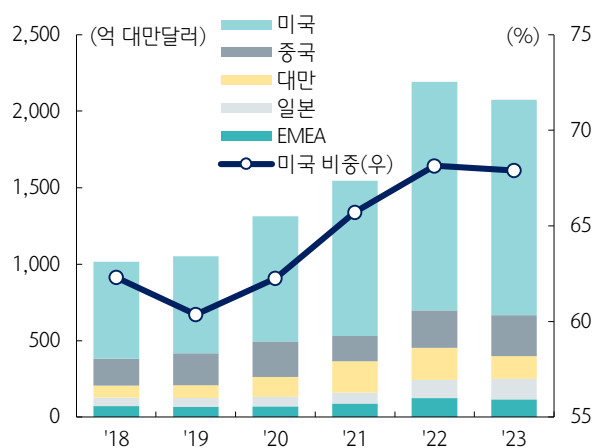
■ 반도체 제조 업체들은 미국 내 공장을 가동·건설 중인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추가 투자 등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관세 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직 유보적인 입장

- 미국 시장이 중요(매출 비중 60% 이상)한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4나노 파운드리 1공장 가동을 시작하고 2~3나노 제품을 양산할 2, 3공장을 건설 중으로 첨단 패키징 등 추가 투자도 검토 중
 -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빅테크(설계) - TSMC(제조) 구조이기 때문에 압박 수위가 가장 높은 기업
- 마이크론(美) 또한 생산 거점이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에 위치해 단기적으로는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 중
 - 아이다호주, 뉴욕주에 각각 250억, 1,000억 달러(합계 약 180조원)를 투자해 대규모 메모리 R&D 및 제조 공장을 구축 중이며 아이다호 공장은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
-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CHIPSAct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 하겠다고 언급했으며 관세 부과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
- 반도체 공장 건설 후 제품 양산까지 4~5년 가량 소요되고 미국에서의 인건비, 운영비 등이 증가해 칩 제조 비용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의 고민이 많은 상황
 - 대만 팹리스 업체 MediaTek는 관세 영향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 추정하기 어렵다고 언급

■ 반도체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PC 조립업체 또한 美 현지 생산 확대를 고려 중

-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둔 대만 폭스콘(IT 조립업체), Inventec(노트북 제조업체)은 미국 위스콘신, 텍사스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장 위치를 검토하는 등 현지 생산을 고려하며 발빠르게 대응
- 애플은 상당수가 미국 밖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텍사스주에 대규모 AI 서버 공장 신축을 포함해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약 714조 원)를 투자하며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
 - BoA는 애플에 10% 관세가 적용될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아이폰 등 제품 가격을 9%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

그림20 | 대만 TSMC 매출 및 미국 비중 추이



주: EMEA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자료: TSMC

표11 |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미국 생산 확대 동향

분야	기업명	진행상황
메모리	마이크론	아이다호주, 뉴욕주에 첨단 D램 공장 건설 중이며 아이다호 공장은 '26년부터 양산 예정
파운드리	TSMC	애리조나주에 4나노 파운드리 1공장 지난 12월부터 가동 시작
	삼성전자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 건축 중 (47억 4,5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 전)
패키징	SK하이닉스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 예정 (4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 전)
	Amkor(미)	애리조나주 TSMC 공장 부근 패키징 공장 건축 중

자료: 언론보도 종합, 하나금융연구소

■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시에도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대만, 중국 등의 패키징(후공정) 과정을 거쳐 미국 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또한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출 기업이 아닌 수입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관세 부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를 구매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더 크게 짊어질 전망
 - HBM 등 고성능 메모리의 경우 한국 반도체를 대체할 공급처를 찾기 어려워 가격 상승에도 구매가 불가피
- 다만 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IT 소비 둔화로 이어져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은 일부 존재
 -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의 기술 제품 구매력이 900억~1,430억 달러 감소 전망
 - 산업연구원은 한국에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반도체 수출액이 5.9% 감소한다고 전망

■ 반도체 제재에는 AI 패권 확보를 위해 중국 제재 강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수단이 예상

- 타 산업과 달리 미국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자국 내 제조 시설 유치 및 추가 투자를 유도하며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협상 카드로 사용되면서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
 - 메모리 확보 측면에서, 마이크론의 미국 아이다호 D램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 예정이나 초기 생산량은 제한적이며 기존보다 생산 원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점유율을 뺏아갈 가능성은 낮음
- 또한 반도체는 AI 패권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제재는 관세 부과를 넘어 대중 수출 통제, 중국 생산 및 투자 차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전망
- 기업들은 반도체 관세 부과 이전의 협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또는 수출 감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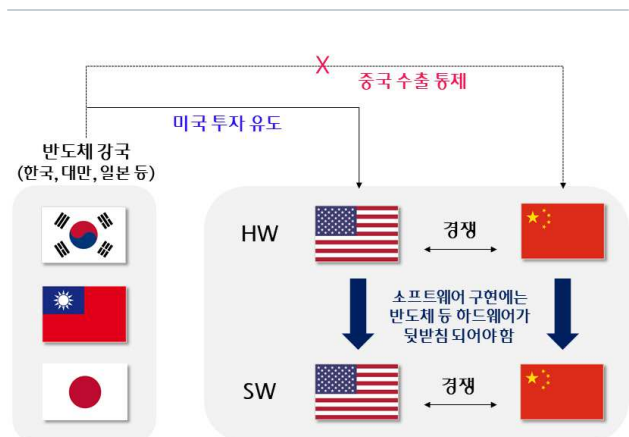
표12 |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생산 거점 현황

분야	기업명	국가				
		미국	한국	중국	대만	아세안
메모리	삼성전자		◎	○		
	SK하이닉스		◎	○		
	마이크론			○	◎	○
파운드리	TSMC	○		○	◎	○
	삼성전자	예정	◎			
패키징	ASE(대만)		○	○	◎	○
	Amkor(미)	예정	○	○	○	○

주1: ◎은 메인 거점을 의미

주2: 마이크론은 일본, 싱가포르에, 글로벌 패키징 1위 ASE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 2위 Amkor는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포르투갈 등에 생산 거점을 보유
자료 : 각 사 자료, 하나금융연구소

그림21 | AI 패권전쟁에 따른 미국의 대응 방향



주: 한국 반도체 수출액(MTI 831 기준) 및 글로벌 반도체 출하액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C30. 자동차

관세^發 불확실성 극심, 현지 생산 확대로 대응

연구위원 오유진

※ Summary : 트럼프 취임 후 발표된 각종 관세 조치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상승. 역대 최고 수준인 차량 가격에 관세 효과가 더해져 미국 내 판매 환경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며,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 현대/기아는 현지생산을 늘리고 GM과의 제휴 등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 반면 한국GM은 멕시코/캐나다 등 다른 생산기지와의 관세율 격차, 본사 전략 등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 국내 대형 부품사는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 생산 확대 및 물량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지 공장이 없는 중소형사는 매출 감소 속 투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

■ (Action) 트럼프, 3월 중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약 25%의 관세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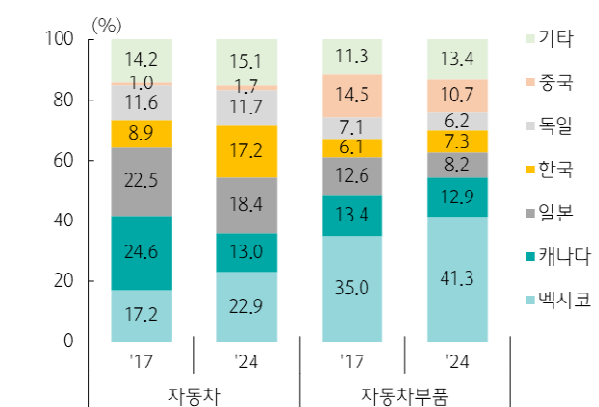
- 트럼프는 미국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와 산업에 중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자동차 무역적자는 '17년 1,437억 달러에서 '24년 1,999억 달러로 급증
- 미국 내 자동차 소매 판매량(1,600만대/년) 중 약 22%인 370만대가 수입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중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 독일이 전체 수입액의 83%를 차지하며 주요 표적
 -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수입 M/S가 상승한 주요국('17 대비 '24, 한국 +8.4%p, 멕시코 +5.8%p)
- 미국향 자동차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현재 유예 중)에 이어 철강·알루미늄 등 자동차 주요 원자재에 대한 품목 관세와 불공정 무역 등을 고려한 상호 관세, 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까지 다방면의 영향이 중첩되어 불확실성이 크게 상승
 - 현재 美 승용차/트럭 관세율은 각각 2.5%, 25%(한국산 승용차, 멕시코/캐나다산 트럭 등 예외 존재)

표13 |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 자동차와 연관된 부분

대상	계획	현황
멕시코/캐나다	미국으로의 모든 수입 제품에 25% 관세 부과	2.1 행정명령, 3.3까지 유예
중국	기존 관세에 10% 추가, (2.10~ 발효)	중, 특정 품목 대상으로 15% 보복관세 부과
철강/알루미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 부과	3.12 발효 예정
상호관세	국가별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해 상응하는 관세 부과	3월말까지 상세 계획 작성 예정
자동차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약 25% 관세 부과	-

주 : 음영은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자료 : 언론보도 종합

그림22 | 미국의 주요국별 자동차 및 부품 수입액 비중 변화



주 : 자동차는 HS코드 8703, 자동차부품은 HS코드 8708, 금액 기준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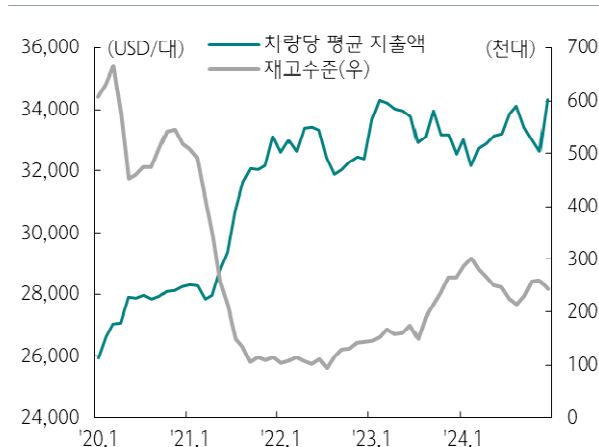
■ 역대 최고 수준인 차량 가격에 관세가 더해져 미국 내 차량 구매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판매 환경 둔화 속 관세 전가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 높은 차량 대출 금리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차량 가격 상승 등으로 미국 내 평균 차량 구매 지출이 33,000달러 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전쟁 및 경기 둔화 우려로 소비심리가 저하되면서 차량 재고가 점차 높아지는 등 판매 여건이 후퇴
-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차량 판매 가격은 수 천 달러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영향은 소비자 및 완성차 및 부품사 등이 나눠서 부담할 전망
 - 관세로 인한 차량 가격 상승:(울프리셔치) 3,000달러/대, (폭스 오토모티브) 5,855달러/대
 - USITC는 북미외 지역의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수요 11% 감소, 수입 74% 감소, 평균 차량 가격 5% 상승, 미국 내 생산 이익 5%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발표('24.2)
- 만약, 25%의 수입 관세를 소비자 전가 없이 완성차가 모두 감내한다고 가정한다면 현대차/기아의 관세 추가 부담액은 약 9조원으로 '24년 영업이익의 33%에 해당하며, 한국GM은 '23년 영업이익('24년 실적 미발표)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의 관세 부담이 발생
- 한국과 유사한 수출구조를 갖는 일본계 업체들도 관세로 인해 평균 50% 수준의 감익이 예상되는 등 관세조치 실행시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전망
 - 미국 내 생산/판매 비중: (도요타)49% (혼다)62% (닛산)53% (스바루)51% (현대/기아)42%

■ 한국 자동차 업계의 높은 미국 의존도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가운데 트럼프 2.0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회피를 위해 북미 수출-생산 전략의 조정이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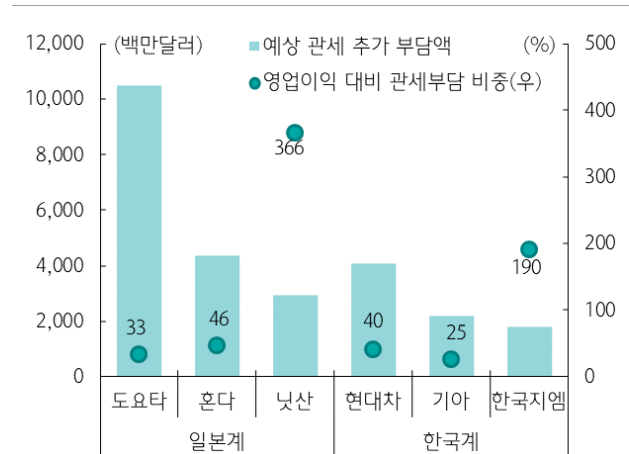
-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부품을 포함한 연간 수출액은 트럼프 1기가 시작된 '17년 203억 달러에서 '24년 430억 달러로 연평균 11%씩 증가해왔음

그림23 | 미국 내 평균 차량 구매 지출액과 재고수준



자료 : BEA

그림24 | 수입차 25% 관세 부과시 주요 완성차 업체의 추가 부담액



주 :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 가정, 일본계는 '25년FY 예상 영업이익, 현대차/기아는 '24년 영업이익, 한국지엠은 '23년 영업이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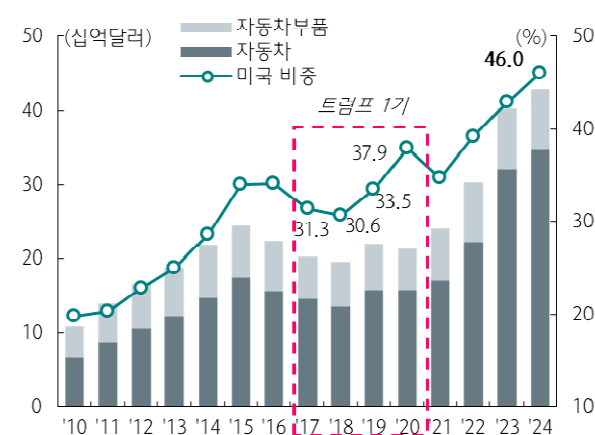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연구소

-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성장세가 더디고 경쟁이 치열한 유럽보다 시장 규모가 큰 미국을 집중 공략하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 중 미국 의존도는 '24년 50%(물량기준)를 처음으로 초과
- '24년 수출 278만대 중 143만대가 미국으로 선적되었으며, 업체별로는 현대차 44%(64만대), 기아 26%(38만대), 한국GM이 29%(42만대) 기록하며 직접 영향권. 기아는 멕시코 생산물량도 위험 요인
- 자동차 산업 내 미국의 중요도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보다 폐쇄적인 형태로 美 무역정책이 변화하면서 "수출 - 현지생산 - 인접국생산 최적화"라는 기존 완성차 전략에 중대 고비 도래
-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임을 강조하였으며,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둠

■ (현대/기아) 현지생산 확대, GM 제휴 등으로 대응 모색중이며, 국내 노조와의 합의 필요

- 현대차그룹은 조지아 신공장(HMGMA, 30만대) 생산능력을 최대치인 5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기존 앨라배마(36만대)·조지아(34만대) 공장까지 포함하면 약 120만대까지 확대 가능
- 이는 현대차그룹 미국 판매량('24년 171만대)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던 수출 물량(102만대)의 50%를 현지에서 공급해 관세 부담을 일부 회피할 수 있음
- 다만, 국내 생산모델을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노사합의가 필요하고 최근 국내 판매 부진으로 현대차·기아 노조가 미국 생산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실제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
- 美 생산 확대 시 국내 생산 물량의 대체 수출처를 확보해야 하는데 EU 등의 무역장벽 강화, 신흥국에서 중국 전기차기업과의 경쟁 심화, 인니 등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
- 기아는 멕시코 공장 판매량('24년, 27만대)의 약 62%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관세 부과에 대비하여 생산량 일부를 미국 공장으로 이전하고, 멕시코→캐나다로의 수출 확대를 고려 중
- 기아 멕시코 공장의 '24년 소매 판매량 가운데 약 5%(1.1만대)는 캐나다로 수출

그림25 |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액과 비중



주 : MTI 기준, 미국 비중은 자동차와 부품 합산
자료 : 무역협회

표14 | 국내 완성차 기업별 미국에 대한 노출물량('24년 기준)

	현대차		기아		한국GM	
	물량 (만대)	비중	물량 (만대)	비중	물량 (만대)	비중
수출 (韓→美)	63.7	64%	37.7	38%	41.9	100%
미국 생산	36.2	36%	35.4	36%	-	-
멕시코 생산	-	-	26.3 ¹⁾	26%	-	-
합계	99.9	100%	99.4	100%	41.9	100%

주 1) 기아 멕시코 생산분은 멕시코 내수, 미국 수출, 캐나다/남미 수출 등으로 판매
2)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타타대우는 최근 3년간 미국 수출량 없음
자료 : KAMA

- 한편, 현대차그룹은 '24년 9월 GM과 승용·상용차 및 내연·전기·수소차를 공동개발·생산하는 내용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 GM의 미국 내 유휴 생산기지를 활용하여 차량을 생산하거나 원자재 통합 소싱 등으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할 가능성 존재
 - GM은 미국 내 11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양사의 미국 등 글로벌 생산망을 전반적으로 공유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논의를 진행 중. '25년 1분기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

■ (한국GM) 본사 결정에 종속되어 대응책 제한, 여타국 생산기지와의 관세율 격차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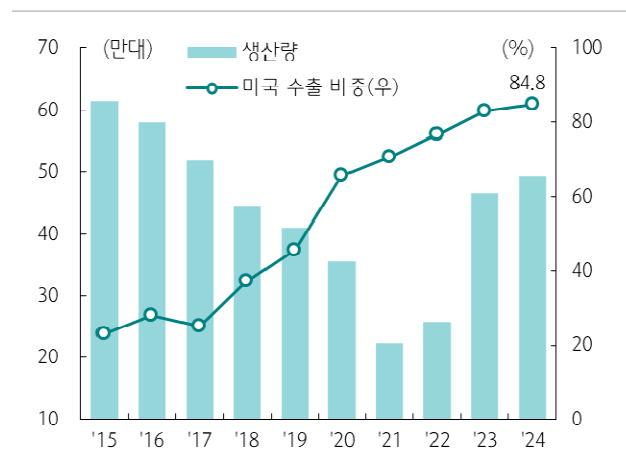
- 한국GM은 생산량('24년, 49.4만대)의 85%를 미국으로 수출(41.8만대)하면서 GM의 수출전용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24년 내수 판매량은 약 2.5만대에 불과
- 수출 차종이 엔트리급 소형 SUV인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 등 2종에 불과하고, 중저가 모델의 특성상 가격 민감도가 높아 25% 관세 부과시 가격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
 - 한국GM의 '24년 평균 수출단가는 17,252달러로 美 평균 자동차 구매비용(\$33,213)의 절반 수준
- GM CFO는 美 관세가 영구화되면 공장 이전을 고려해야 하지만 대규모 투자 후 관세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어 지금은 결정이 어렵다고 언급했으며, 단기적으로 기존 공장의 생산을 조정해 대응하겠으나 장기화될 경우 공장 이전 및 생산 할당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 GM은 '13년 호주, '15년 인도네시아·태국, '17년 유럽·인도, '18년 한국 군산공장 등 경영 환경에 따라 해외 생산기지 철수를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어 한국GM의 위기감이 고조
- 현재 GM의 주요 생산시설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중국, 한국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지 수요 중심인 브라질/중국을 제외하면 멕시코/캐나다와 한국의 상대적인 관세율 격차, 한-미 간 생산비용 차이 등이 물량 배정의 관건이 될 전망
 -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관세 부과 방침으로 GM의 멕시코 생산물량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으나, 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면서 백지화

표15 | 현대차-GM 협력관련 진행상황

분야	내용
공동구매	- 북미, 중남미를 중심으로 차량용 원자재 관련하여 공동구매를 추진 - 아이템별로 바인딩 계약을 체결 중
상용차 협력	- 현대차가 제조하고 있는 상용 전기트럭을 GM이 리베징(rebadging)하는 전략 검토 - GM과 협력 통해 북미 상용차시장 진출 기회 모색
승용차 협력	- 큰 틀에서 양사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양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차종 선정 작업 중

주 : 2024년 4Q 현대차 컨퍼런스콜(1.23) 중 주요 발언
자료 : 현대차

그림26 | 한국GM의 생산량 중 미국 수출 비중 변화



자료 : K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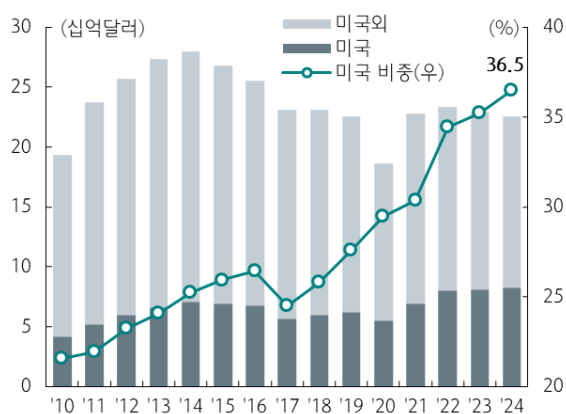
■ (국내 부품사) 대형사의 경우 미국 생산 확대 및 물량 조정 등을 통해 관세 영향을 일부 회피할 수 있지만, 현지 공장이 없는 중소형 부품사의 경우 매출 감소 속 투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

- 현대모비스(모듈), 현대트랜시스(변속기, 시트), 현대위아(엔진), HL만도(브레이크), 한온시스템(공기조화기), 에스엘(헤드램프) 등 미국에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형 부품사들은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 및 인근지역 생산물량을 조정해 관세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
- 반면, 미국 공장없이 멕시코/캐나다에만 진출한 부품사나 국내 공장에서 직접 북미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관세 대응이 사실상 어렵고, 추가 투자 부담도 높아 우려
 -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완성차 업체가 관세 전가를 위해 부품 단가 하락 압력을 높이는 등 간접적 영향은 피하기 어려움
- 현대차/기아, 한국GM 등 주요 완성차의 대미 수출 축소로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미국 내 현지 조달율을 높이는 경우 내수 기반 중소 부품사의 수익 창출력이 훼손될 가능성
- 현대차그룹은 원가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현지 생산이 가능한 2, 3차 협력사를 찾고, 현지화율이 낮은 2, 3차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시설 건설을 제안하는 등 지원책 마련
 - 현대차/기아의 부품 현지화율은 90%가 넘지만, 1차 협력사에 납품하는 2, 3차사의 현지화율은 저조

■ 트럼프 취임 후 사업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져 있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당분간 대규모 투자결정을 보류하고 기존 생산시설의 재조정 및 美 공장 가동 극대화를 통해 대응에 나설 전망

-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美 자동차 산업에 많은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고도화된 북미 자동차 공급망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
 - 짐 팔리(포드 CEO) : 멕/캐 관세 부과시 美 자동차 산업에 이전에 볼 수 없던 구멍이 생길 것(2.11)
 - 車 부품이 완성차에 들어가기까지 미-캐나다, 미-멕시코 국경을 최대 7~8번 통과(bloomberg)

그림27 |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동향



주 : MTI 742 기준
자료 : KITA

표16 | 국내 주요 부품기업의 주요 생산기지 현황

기업	주요 생산부품	미국	멕시코	한국
현대모비스	모듈	✓	✓	✓
현대트랜시스	변속기, 시트	✓	✓	✓
HL만도	브레이크, 서스펜션	✓	✓	✓
한온시스템	공기조화기	✓	✓	✓
에스엘	헤드램프	✓		✓
유라코퍼레이션	와이어링 하네스		✓	✓
포스코인터내셔널	구동모터 코어		✓	✓

자료 : 각 사

- 트럼프가 수입 자동차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부과 국가 및 면제 가능 여부, 다른 관세와의 중복 계상 가능성 등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아 주요 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 중
 - 미야자키 요이치(도요타 부사장) :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시나리오 중심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
 - 메리 바라(GM CEO) : 상황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대규모 자본 지출은 없을 것
-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수준에 불과한 자동차 업계 특성상 25%의 비용 증가를 감내하면서 수익성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여 미국 내 생산능력 확장 및 신규 건설 등을 추진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갈 전망 

표17 | 국내외 주요 자동차 기업의 대응 방향

기업	주요 대응방향(미국 내)			코멘트 및 반응
	기존공장 최적화	기존공장 생산확대	신규공장 건설	
국내	현대차/기아		✓	- 조지아 신공장(HMGMA) 생산능력을 확대(30만대→50만대) - 현대제철 투자 등 공급망 현지화, GM 협력
	현대모비스	✓	✓	-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대 고려(조지아주 전동화 부품공장, 3대 모듈 공장 건설 기 추진 중, 몽고메리 공장 확장)
	만도	✓		- 미국 공장에 대한 물량 조정
	한온시스템	✓		- 고객사 요청시 미국 공장 생산능력을 늘리는 방안 검토
	한국타이어		✓	- 테네시 공장 생산능력 확대('24년 550만개 → '26년 1,200만개)
해외	도요타	✓		- 미국 내 생산체제 확대는 단기간에 불가능하며, 비용 절감으로 관세를 어느 정도 흡수 가능한지 분석 중
	혼다	✓		- 멕/캐 25% 관세가 실시될 경우 연 7,000억엔 규모의 영향이 예상 - 단기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물량을 미국으로 조정하고, 관세 장기화시 생산과 목적지 재구성을 검토
	닛산	✓		- 멕시코에서의 생산을 외부(미국, 일본 등)로 돌리는 방안 고려
	폭스바겐		✓	- 아우디는 미국에 생산 공장이 없어 신규 공장 건설을 검토 중 - 테네시주 채터누가 기존 공장의 확장 검토
	BMW	✓		- 미국 내 상당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고, 정부 관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관세 회피를 위해 특별히 협상할 필요 없음
	벤츠		✓	- 앨라배마 공장에서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하여 현지화 추진 계획
	스텔란티스	✓		- 캐나다/멕시코에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40% 생산 중 - 필요시 미 일리노이주 공장으로 생산물량 이전
	GM	✓		- 자본 투입 없이 관세 영향을 30~50% 회피 가능 - 공급망 조정 및 재고 이동(멕/캐 → 미)을 통해 단기적으로 대응 - EV 생산용 멕시코 라모스 아리스페 공장 생산 축소 및 800명 해고
	포드	✓		- 미국 공장은 이미 풀 가동되고 있으며, 멕시코/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생산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음 - 당장 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상황을 예의 주시 중(2.13)

자료 : 언론보도 종합

HIF 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